

민주, 연차휴가 촉진 등 1호 청년정책 발표... '2030 민심잡기'

민주 '랩 2030', 정책위와 함께 청년 정책 발표 직장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등 관련 정책 제안 민생 드라이브 본격화... "항목별 정책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국면을 맞아 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1호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민생 경제에 방점을 둔 정책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시 김포 편입 등 총선 전 정책 이슈를 띄우는 국민의힘에 대응해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보일 태세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청년 정책 당내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번주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등과 함께 1호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선거가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발표되는 총선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연차 사용 보장, 미소진 연차에 대한 보상 및 연차보상 상한액 조정과 같은 직장인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까지 추진하는 '랩 2030'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청년 정책에 관한 제안을 받는 정책 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장기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총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민생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주부터 현장 일정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엔 '성장률 3% 회복'을 강조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청년을 위한 '3만원 교통패스'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주로 '생활 밀착형' 정책에 방점을 둔 제안들로 최근 수도권 민심 공략을 위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거대 담론을 공약으로 띄웠던 국민의힘 발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3% 성장'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에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단 목소리도 나왔던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민생 분야를 세분화한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친환경, 청년

등 항목별로 총선 공약에 담길 정책 발표를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북구의회, 정례회 대비 전문 역량 강화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31일부터 2일간 북구의원과 직원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진행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의정활동 특강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지역자원 특성화 우수사례 연구 등의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내실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법과 효과적인 방송보도 대응 및 연설기법 등 의정 실무특강을 통한 전문적인 의정실무기법을

공유하였다. 특히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1년 여를 맞아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방안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 자원 우수 사례지를 견학하는 등 의회 전반의 운영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의원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더욱 전문적으로 준비하여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민주 "검찰, '내 식구'에만 약해...범죄 검사 탄핵 앞장설 것"

민주 "국감서 내 식구만 약한 검찰 민낯 드러나" "검사범죄 대하는 검찰 태도, 국민 시각과 괴리" "유독 검찰 범죄 반복...개선 어렵다면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사 범죄와 관련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는 이날 입정문을 통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날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대검 국감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

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으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고검 소속 모 검사들의 음주운전 후 경징계 처분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조가리'에 불과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

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 모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가장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원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